



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 4 차 복 지 환 경 위 원 회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박윤옥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4. 3. 7.

복지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서 용 관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6일 박윤옥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3월 6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등 야생조류 충돌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 규정(안 제4조)
- 다.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라. 실태조사, 교육·홍보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불임1
- 나. 예산조치 : 불임2
- 다. 관련부서 : 환경정책과
- 라. 입법예고 : 2024. 3. 7. ~ 3. 12.(6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야생조류의 사고와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야생조류의 멸종을 저감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상위 관계법령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규정에서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공구조물 설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등 검토결과 입법체계나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야생생물법) 」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소관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충돌방지제품의 사용 등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주기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관리해야 하는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 충돌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의 인공구조물

2. 야생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구조와 자재 등으로 인해 야생동물의 추락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명하거나 빛이 전반사되는 자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늬를 적용해야 한다.

1. 선형(線形) 무늬

가. 가로무늬: 굵기는 3mm 이상이고, 상하간격이 5cm 이하여야 한다.

나. 세로무늬: 굵기는 6mm 이상이고, 좌우간격이 10cm 이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무늬(비정형 또는 기하학적 무늬를 포함한다): 무늬의 직경은 6mm 이상이고 무늬사이의 공간은 50cm² 이하여야 하며, 무늬의 상하간격은 5cm 이하이고 좌우간격은 10cm 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탈출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 내부에서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2. 횡단이동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서 추락하지 않고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3. 회피유도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횡단이동을 유도하는 조를 갖춘 시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의 추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④ 공공기관등은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위치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제7조의3(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대상·주기 및 방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또는 구역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에 대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방법은 별표 3의3과 같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2. 2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제4조 (저감대책)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해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투명보호벽에 맹금류 스티커 부착
- 다산동, 오남읍 도로 270m 스티커 부착 100,000천원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관련부서
총 소요액		100	-	-	-	-	-	
조류충돌 방지시설 설치사업	도비30%	30	-	-	-	-	-	도로관리과
	시비70%	70	-	-	-	-	-	

다. 재원조달방안: 2024년 도비보조사업 가내시

○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21037(2023. 11. 3.)호]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조례 제정된 후 관련 부서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 소요 예산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사업지 및 사업량이 미확정되어 추후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남양주 환경국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제2-2쪽)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해당없음 (비수익사업)							
세 출		100,000	-	-	-	-	100,000
시설비		100,000	-	-	-	-	10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30,000	-	-	-	-	30,000
	보조금	30,000	-	-	-	-	3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70,000	-	-	-	-	70,000
	지방세	70,000	-	-	-	-	7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